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신 뉴딜정책과 인프라 확충



최준영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장
031-8041-0001

세계 각국의 금융 및 산업 위기 극복 대책

글로벌 경제의 심장부인 미국 월가에서 촉발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강타하면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추락하는 총체적인 경기 지표, 피해상황, 위기대책이 연일 메스컴의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본격적인 위기 발생후 3~4개월 남짓 지나면서 아이슬란드 같은 세계 5위의 국민소득 국가를 회복하기 어려운 빚쟁이 나라로 만드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수 천만 명을 일자리에서 몰아낸다.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을 반 토막 내다시피 하고 실물자산도 폭락하여 부자나 빈자, 부강한 나라나 가난한 나라를 가리지 않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2009년 새해 들면서 가중되기 시작하는 이러한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짐작하기 어렵다는데 분세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 각국 정부는 위기상

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상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경기회복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면서 그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선 발등의 불인 금융회사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자금순환에 애로를 겪는 개별 기업과 산업에도 공격자금을 지원해 주는 실정이다. 국제무역에서 민감한 교역재인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조차 WTO체제에서 급기시 하고 있는 정부보조금 지원율 서슴지 않겠다는 상황에 까지 이른 것이다.

모든 업종, 모든 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는 인식아래 산업별, 기업별로 선별적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작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물론 대상 기업과 지역 주민들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G-20 정상회의 등 국제적인 정책공조와 함께 각국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어, 언젠가 대책의 성과가 싹트기 시작할 것이고 걸실을 맺는 시기가 되면 그 열매는 오히려 더 풍성해 질 수 있다는 위안을 갖는다.



뉴딜정책의 재등장

표면적으로 세계경제는 금융부분의 거품현상이 꺼지면서 도미노 식의 붕괴가 발생하고 있어 구제금융 투입을 통해 연쇄적인 디플트를 차단하면 위기 극복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금융부분의 충격이 실물부분으로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경제주체 중 정부를 제외한 기업과 기계의 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소비, 투자, 무역을 위축시키면서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려 극심한 경기침체를 야기하는 대공황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그 동안 막강하다고 평가받아 온 시장경제의 복원력이나 정상적인 경제정책을 통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계경제 전반에 누적된 거품이 너무 방대하고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이고 광범위하여 특단의 처방이 아니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1929년에도 꼭 같은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를 맞아 케인즈의 유효수요 이론에 근거를 둔 뉴딜정책으로 대처한 사례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글로벌 경제는 80년 전의 미국, 유럽 중심의 경제체제와 많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세계 경제의 규모, 생산능력 및 선진국·개도국 등 경제권역이 훨씬 크고 많으며, 상품·금융·자본·인력의 이동 및 상호의존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경제의 핵심 이슈가 당시는 인플레이션이고 현재는 디플레이션인 것도 다르다.

그러나, 총체적인 경기침체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정책만으로 한계가 있고 대규모 감세 및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당시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이른바 New Deal 정책이 다시 내두워 것이다.

다만, 대형 공공사업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한 1930년대식 뉴딜정책과 달리, 신산업·신기

술·인력·교육·사회·복지·SOCX 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정교하면서도 대규모로 투입자본 하는 “신뉴딜(New New-Deal)”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신(新) 뉴딜정책

우리나라는 특히 정치권 등 정책결정자에서부터 경제학계, 일반국민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강한 편이다. 금융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치부하고 금기시 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 살리기를 하는데도 정부보다는 민간이 투자를 늘려 주기를 바라고, 자금부입 보다는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국내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치중하여 왔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02년초 국민의 정부 말기에 이미 재추진하기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가 추진을 보류한 ‘경인운하’ 사업을 금융위기의 여파가 심화되자 실행하기로 하고 한 걸음 더 나가 운하 확장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상경제정부 체제에 돌입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이전에 상상하기 어려웠던 단기적인 금융자금 공급 확대 뿐 아니라, 중장기 부문에도 파란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초부터 수출이 적감하여 내수확대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사업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2008년 우리 경제의 성장을 당초 전망치에 비해 끌어내리는데 가장 큰 요인은 건설부문의 침체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가 큰 대규모 건설사업인 “4대 강 살리기”에 역점을 두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대형 중기사업으로 이른바 “녹색뉴딜”에 정부가 50조원을 투입하여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장

출도 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실현하는 야심 찬 계획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과제로 10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신성장동력” 17개 산업을 육성하는 원대한 발전 전략도 제시하였다.

표준화에 대한 과감한 투자 적기

그래도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 경제 회생을 위한 정부의 재정자금 투입 규모가 작은 나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인 ‘신뉴딜’ 급의 대형사업을 발굴하고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는 주로 SOC 등 물적(physical)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기왕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쏟아 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국가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게 될 분야에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뭐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투자를 미루거나 미흡하게 지원하고 있는 분야가 얼마나 많은가? 특히 기술, 지식서비스 및 시스템, 표준화, 데이터베이스,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인문학 등을 비롯한 지식기반 인프라 분야가 그러하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산업과 제품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 환경, 건강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표준화 분야를 살펴보자. 기술발전과 제품사이클이 단축되는 시대에 표준과 표준화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녹색기술, 신성장동력산업 등에 막대한 R&D 투자를 하는 것도 결국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을 통해 국내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제표준을 선점하지 아니하고는

시장을 지배할 수 없다.

각국 정부가 표준화 전략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물론 공공기관, 민간기업들도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인프라 성적을 가진 표준화 사업에 정부가 과감히 투자하여 국내 표준화에 관련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국제표준화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경기회복에 크게 도움이 되면서도 국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오늘날 국제무역에서 표준의 중요성은 ‘세계표준을 주도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한마디로 대변하고 있다. GDP 대비 수출의존도가 38.3%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우리나라가 표준화에 대한 투자를 내폭 늘리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국가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여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설령 경제가 조기에 정상 궤도에 진입하더라도 이번엔야말로 국가부채 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재정확대를 통하여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 놓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 기술표준 2009.2